

이슈브리프

No. 2025-04(S)

변화하는 유럽의 안보 환경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김세미

부연구위원

2025-08-04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유럽에 대한 입장은 유럽이 자체 안보와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랜 논쟁을 다시 부각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어 왔지만, 정치적 추진력은 지속되지 못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은 이 논의에 긴박감을 불어넣었으나, 실질적인 행동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야 시작됐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안보 공약의 신뢰성과 유럽 국가들 간의 상이한 위협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국에도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공약이 불확실해지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향후 방향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유럽 관여 수준 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시적 조정일 수도 있고, 고립주의 전환의 시작일 수도 있으며, 또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가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이슈브리프는 유럽 안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이 고려해야 할 주요 함

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안일했던 유럽

수십 년간 이어진 안보 안일주의는 유럽이 두 가지 주요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복귀다. 2021년 11월,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 집결과 침공 준비를 경고했지만, 유럽은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2021년 봄에도 러시아가 “전투 준비 점검” 명분으로 병력을 집결시킨 전례가 있었던 탓에, 당시 유럽 내에서는 이를 단순한 무력 시위로 보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하지만 2022년 초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뚜렷해지자,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 예컨대, 2022년 2월 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에도 유럽은 준비가 부족했다. 1기 행정부(2017~2021년)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의 안보 보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파리기후협정과 이란 핵합의(JCPOA)에서의 탈퇴를 통해 일방주의 기조를 강화했다. 이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7년 G7 정상회의 후 “유럽이 다른 국가에 의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고, 마크롱 대통령 역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했다.

물론 다수 유럽 국가는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미국 의존 축소가 NATO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프랑스가 유럽의 공동 이익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운다는 의심도 존재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NATO 집단방위조항(제5조)을 “신성한 약속”으로 재확인하며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 유럽 내 전략적 자율성 논의는 주로 수사적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 실질적인 통합이나 독립적인 방위 역량 강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평화배당’의 영향과 분열된 유럽의 안보 태세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은 냉전 종식 이후 다수 유럽 국가에 자리 잡은 안일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소련 붕괴 후 유럽 각국은 국방비를 대폭 줄이며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예컨대 독일은 1990년 GDP 대비 국방비 2.52%를 2015년 1.12%까지 감축했다. 미국도 같은 시기 국방비를 줄였으나, 2001년 9·11 이후 다시 증액했다.

‘평화배당’은 두 가지 효과를 낳았다. 첫째, 전통적 안보 위협이 사라지자 EU는 경제·법률·제도 통합에 집중했고, 이는 전문가와 관료 주도로 이뤄졌다. 그 결과 EU는 기술관료적 거버넌스를 특징으로 하는 초국가 기구로 자리 잡았지만, 미국은 유럽의 국방 투자 부족에 점점 더 불만을 가졌다.

둘째, NATO의 역할과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안보 이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할 공간이 생겼다. 1994년 러시아가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PfP)에 가입하며 NATO-러시아 협력이 시작됐고, 2008년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 이후 협력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AfD, 프랑스의 RN 등 NATO 탈퇴 또는 참여 방식 변경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성장했다.

회원국 간 위협 인식도 엇갈렸다. 러시아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미국의 관여 확대를 요구했지만, 헝가리와 터키는 러시아와 긴밀한 정치·경제 관계를 유지하며 NATO의 단결을 약화시켰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EU·NATO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터키는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면서도 푸틴과의 전략적 관계를 관리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중재자로 행동하려 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영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중대한 계기로 보며 방위 태세 강화에 착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핵 억지력을 ‘유럽의 핵우산’으로 제안했고,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이를 미국의 핵우산을 보완하는 논의로 보자고 했다. 독일은 NATO 개혁과 EU-NATO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비 증액도 약속했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에도 대서양적 행위자로서 NATO에 대한 헌신과 영미 간 “특별관계”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결국 NATO 회원국들의 다른 위협 인식과 국내 정치, 전략 우선순위는 NATO 결속을 약화시키며 NATO 내 전략문화는 잠재적 안보 위협을 선제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ATO 옵션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에 대한 경멸은 이미 NATO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NATO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하며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적했다. 1기 행정부에서 수위는 다소 낮아졌지만,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부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고, 2025년 초에는 NATO의 방위비 지출 기준을 GDP의 2%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NATO 관련 옵션은 회원국 의무 조정 요구, 미국의 NATO 내 역할 축소, 심지어 동맹 탈퇴까지 포함된다. 실제로 트럼프가 1기 당시 NATO 탈퇴를 검토했으며 2020년 재선 시 탈퇴 계획도 거론되었다. 다만,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상원의 승인 없이는 대통령의 독단적 NATO 탈퇴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NATO에서의 공식 탈퇴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NATO의 강점으로 NATO-유럽 방위구조의 분리 금지, 방위자원 중복 방지, 비EU NATO 회원국 차별 금지를 꼽았고, 이는 ‘3D’ 원칙으로 불리며 유럽의 미국 의존 구조를 고착화했다. 따라서 미국의 NATO 탈퇴는 오랜 투자로 확보한 전략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NATO 집단방위조항(제5조)이 역사상 단 한 번, 9·11 테러 대응에만 발동된 것도 NATO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보다 현실적인 옵션은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추가 증액하도록 압박하고, NATO 활동 참여를 방위비 수준에 연계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관이었던 키스 켈로그는 2% 기준 미달 회원국은 NATO 제5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훈련 및 자산 공유에서도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방위비 5% 상향 주장이나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겠다”는 발언은 유럽 안

보 우려에 대한 무감각을 잘 보여준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유럽에서 최근 일어난 변화는 한국에도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NATO의 미래는 미국의 유럽 관여 수준, NATO 회원국들이 개혁 비전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맹 내 위협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 NATO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며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길, 부담 분담 강화를 통해 미국의 참여를 유지하는 길, 혹은 내부 분열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럽의 집단안보 경험은 안주와 과잉확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교훈으로, 다른 지역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는 미국이 오랜 동맹국들과의 관계와 협력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등 적대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동맹국을 우회할 가능성도 드러났다. 만약 이런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배제된 채 북한과 미국 간 비밀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더하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미-유럽 안보 역학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협상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 만약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하고 인도-태평양에 더 집중한다면 그 상황이 한국에 주는 기회와 도전을 모두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NATO 및 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유럽은 모두 지역 내 수정주의 세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 억제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구조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통 기반 위에서 한국은 방위산업과 기술 역량을 활용해 NATO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동맹 체계의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NATO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견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를 더욱 긴밀히 연계시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은 NATO와의 협력을 한층 확대해, 사이버 안보, 우주, 정보전, 인프라 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ITPP)'을 적극 활용해 협력의 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 체계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은 AUKUS, 쿼드, NATO-IP4 같은 소다자주의 협력체들을 통해 신뢰 구축과 상호운용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과 협력하며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실질적 제도화를 준비하며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결론

미국의 유럽 관여 축소 속에서 유럽의 방위력 강화와 NATO의 재구축은 앞으로도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바 있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유럽에 변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시사해 왔다. 이제 유럽은 NATO를 더욱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동맹으로 재편할 것인지, 아니면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유사한 경고 신호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인도-태평양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집단 안보 체계 구축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구체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허브-스포크(hub and spoke) 체제 내 스포크(spoke)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지역 안보 체계가 양자 동맹을 보완하는 메커니즘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보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 NATO와의 협력도 확대함으로써 외교 다변화, 국제적 위상 제고,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도모해야 한다.

본 글은 영문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입니다(2025-03).

("Europe's Shifting Security Landscape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